

#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 2 교 시

- 일 반 (필수·선택) -

### 목 차

【경 찰 학】 (필수)	.....	1
【범 죄 학】 (필수)	.....	8
【행 정 법】 (선택)	.....	13
【행 정 학】 (선택)	.....	19
【민 법 총 칙】 (선택)	.....	24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경 찰 대 학

경찰대학 : <http://www.police.ac.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과 관련한 외국의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띠틈 판결이다.
- ②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는 사상을 확립시킨 계기가 된 판결은 1882년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이다.
- ③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확립된 판결은 맵(Mapp) 판결이다.
- ④ 국가배상이 인정된 최초의 판결은 에스코베도(Escobedo) 판결이다.

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 ③ 행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작용하며, 사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작용한다.
- ④ 질서경찰과 보통경찰은 경찰 활동 시 강제력의 사용유무로 구분된다.

3. 경찰의 임무와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인간의 존엄·자유·명예·생명 등과 같은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에 대한 위험방지도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나, 무형의 권리에 대한 위험방지는 경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경찰공무원이 국회 안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에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라.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에서만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나.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 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라.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라.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종결하거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 ① 가.(O) 나.(X) 다.(O) 라.(X)                      ② 가.(X) 나.(X) 다.(O) 라.(O)
- ③ 가.(X) 나.(X) 다.(X) 라.(O)                      ④ 가.(X) 나.(X) 다.(X) 라.(X)

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증거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7.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펠드버그는 경찰이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② 텔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 ③ 윌슨(O.W.Wilson)은 ‘경찰은 어떤 작은 호의, 심지어 한 잔의 공짜 커피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
  - ④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를 허용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8.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자와 2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직·간접적 경비, 장소, 인력, 또는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다음 우리나라 경찰윤리강령들을 제정된 연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
|-----------|------------|
| 가. 새경찰신조  | 나. 경찰헌장    |
| 다. 경찰윤리헌장 | 라. 경찰서비스헌장 |
- ① 가→나→다→라
  - ② 나→가→다→라
  - ③ 나→라→가→다
  - ④ 다→가→나→라
10.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시(1829년)한 로버트 필 경(S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경찰개혁안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 ② 범죄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 ③ 단정한 외모가 시민의 존중을 산다.
  - ④ 경찰의 효율성은 항상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1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시기의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군정하에서는 조직법적, 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경찰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 ② 광복 이후 신규경찰 채용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경찰경력자들이 다수 임용되었으나,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채용되었다.
  - ③ 의경대는 상해임시정부시기 운영된 경찰기구로서 교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 ④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
12. 한국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광복 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 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 하기도 하였는데, 1945년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나.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제정되었다.

다.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정부조직법」이었다.

라. 한국경찰 최초의 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고, 한국경찰 최초의 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마.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3. 외국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국은 경찰업무의 집행에 있어 범죄대응의 효율성보다는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어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강조하는데, 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어 있다.
  - ② 프랑스 군경찰은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일본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개시·진행권 및 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찰과 상호대응한 협력관계를 이룬다.
  - ④ 독일경찰은 연방차원에서는 각 주(州)가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주(州)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州) 내무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주(州)단위의 국가경찰체제이다.
14.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뒤죽박죽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정책결정모델은 무엇인가?
- ① 카오스모델
  - ② 쓰레기통모델
  - ③ 아노미모델
  - ④ 혼합탐사모델

15. 경찰조직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때 내용이론을 주창한 사람이 아닌 자는?
- ① 맥클랜드(McClelland)      ② 허즈버그(Herzberg)  
③ 아담스(Adams)      ④ 매슬로우(Maslow)
16.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조직의 역사, 교통통신의 발달, 관리자의 리더십(Leadership), 부하의 능력 등은 통솔범위의 중요 요소이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는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하계층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편성원리로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리이다.  
③ 무니(J. Mooney)는 조정·통합의 원리를 조직의 제1원리이며 가장 최종적인 원리라고 하였다.  
④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 누구나 한 사람의 상관에게 보고하며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이다.
17. 「국가재정법」상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경찰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우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III급 비밀로 하며, II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비밀열람기록전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전직 대통령이 현재 거주하는 사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②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일본대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일요일에 주한일본대사의 숙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그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확장기를 사용한 옥외집회가 가능하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시법이 규정하는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다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2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나.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라.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가.(X) 나.(X) 다.(X) 라.(X)      ② 가.(O) 나.(X) 다.(O) 라.(X)
- ③ 가.(O) 나.(X) 다.(X) 라.(O)      ④ 가.(O) 나.(X) 다.(X) 라.(X)

22. 다음 사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A의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고 C녀는 D남과 혼인하여 살다가 이혼하였다. 그 후 A와 C가 재혼하였다. A에게는 부친 E가 있으며, C에게는 모친 F가 있다. 한편 A의 형제자매로는 남동생 G가 있으며, C의 형제자매로는 여동생 H가 있다. G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충남 아산에 있는 A와 C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H는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 ① B                      ② F                      ③ G                      ④ H

23.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비경찰활동은 하향적 명령체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② 경비수단의 종류 중 체포는 상대방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이며 직접적 실행행위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③ 경비경찰은 실행행위시 상대의 저항력이 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강력하고 집중적인 실행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④ 경비경찰 활동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현상유지적 활동 수행의 특성을 가진다.

24.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마.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나.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다.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 라.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마.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① 가.(X) 나.(O) 다.(X) 라.(O) 마.(X)
- ② 가.(X) 나.(O) 다.(O) 라.(X) 마.(O)
- ③ 가.(X) 나.(X) 다.(X) 라.(O) 마.(X)
- ④ 가.(X) 나.(O) 다.(X) 라.(X) 마.(X)

25.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가.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3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제1항의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제외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라.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외국인은 입국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 ① 가.(O) 나.(X) 다.(O) 라.(O)      ② 가.(X) 나.(O) 다.(O) 라.(O)
- ③ 가.(X) 나.(X) 다.(O) 라.(X)      ④ 가.(O) 나.(X) 다.(O) 라.(X)

26.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나.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원주 및 관할 감독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가.부터 라.까지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법의 법원이 된다.  
나. 경찰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법원이다.  
다.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라. 경찰법의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 ① 가.(O) 나.(X) 다.(X) 라.(O)      ② 가.(O) 나.(O) 다.(X) 라.(X)  
③ 가.(O) 나.(O) 다.(X) 라.(O)      ④ 가.(X) 나.(O) 다.(X) 라.(O)

28.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우에 서 있도록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 ①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②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③ 직접원인설에 의할 때 경찰책임자는 B이다.  
④ 교통장애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9.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에 무관하게 행위책임을 진다.  
③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④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30. 경찰상 긴급상태(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②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③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 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④ 경찰권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찰비책임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하며, 결과제거청구와 같은 구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3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지만,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 ③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④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며,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자체에서 수행한다.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4.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④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35.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 ② 경찰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③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 ④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36.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가.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시 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해양경찰관서 미포함)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부상자에 대해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경찰관은 구호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38.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산의 침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긴급하게 사용할 때에는 안전검사 없이 안전교육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 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라.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그 안전교육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경찰의무의 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②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유일하다.
- ③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위해를 제거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자연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가능하다.
- ④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하명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외에 경찰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40.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가. 경찰관들의 시위진압에 대항하여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다.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
- 라.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마.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 어떠한 이론이 범죄 또는 형사사법에 관해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론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 에이커스(Akers)와 셀러스(Sellers)가 제시한 범죄학 이론 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검증 가능성
- ② 시대적 대응성
- ③ 경험적 타당성
- ④ 정책적 함의

2. 범죄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다변량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양적연구는 질적연구에 비해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③ 실험연구는 연구자가 필요한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 ④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는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기본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인식한다.
- ② 합의의 결과물인 실정법에 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다.
- ③ 일반시민에 대한 형벌의 위하효과를 통해 범죄예방을 추구한다.
- ④ 인간의 행동은 개인적 기질과 다양한 환경요인에 의하여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4. 법과 형사사법에 대한 갈등주의적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이론은?

- ① 챔블리스(Chambliss)의 마르크스주의 범죄이론
- ② 체스니-린드(Chesney-Lind)의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 ③ 블랙(Black)의 법행동이론
- ④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아노미이론

5.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뇌와 신경전달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뇌의 변연계에 존재하는 편도체는 공포 및 분노와 관련되어 있다.
- ② 뇌의 전두엽은 욕구, 충동, 감정 관련 신경정보를 억제하거나 사회적 맥락에 맞게 조절, 제어, 표출하게 하는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 ③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을 경우 충동, 욕구, 분노 등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 및 쾌락과 관련되어 있다.

6. 생물사회학적 범죄연구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되는 연구는 무엇인가?

마틴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청년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 후 귀가하던 도중 하룻밤 목계 된 여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한 후 건실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연구자는 이 두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마틴의 4대째 후손들까지를 조사하였는데,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는 법률가, 성직자, 의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고 범죄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에 비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은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인이거나 범죄자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범죄성향이 전적으로 유전에 의해 자식에게 대물림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만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범죄성향을 닮은 이유가 순전히 유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제공한 환경의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덕데일(Dugdale)의 주크(Juke)가문에 관한 연구
- ② 고다드(Goddard)의 칼리카크(Kallikak)가문에 관한 연구
- ③ 서덜랜드(Sutherland)의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가문에 관한 연구
- ④ 제이콥스(Jacobs)와 스트롱(Strong)의 연구

7.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에 대한 10가지 분류에 관해 기술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지박약성 - 모든 환경에 저항을 상실하여 우왕좌왕하고, 지능이 낮은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내심과 저항력이 빈약하다. 상습범, 누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 ② 기분이변성 - 기분 동요가 많아서 예측이 곤란하고, 폭발성과 유사하나 정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화범, 상해범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 ③ 무력성 -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호소하여 타인의 동정을 바라고 신경질적인 특징을 보이나, 범죄와의 관련성은 적다.
- ④ 발양성 - 자신의 운명과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이며, 경솔하고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 현실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남발하기도 한다. 상습사기범과 무전취식자 등에서 이러한 정신병질이 많이 발견된다.

8.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리학적 범죄이론에는 범죄자의 정신을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정신분석이론’, 범죄자의 행위가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파악하는 ‘행동이론’, 범죄자의 개인적 추론 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범죄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인지이론’, 각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행성을 찾으려는 ‘인성(성격)이론’ 등이 있다.
- ② 아이젠크(Eysenck)는 신경계적 특징과 범죄행동 및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을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신경증(Neuroticism) 등 성격의 3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 ③ 헤어(Hare)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표(PCL-R)를 개발하였으며, 오늘날 사이코패스 검사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④ 슈나이더(Schneider)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정신병질자이므로 정신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범죄원인론 중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학파는 범죄의 원인보다 형벌 제도의 개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② 고전주의 범죄학은 계몽주의 시대사조 속에서 중세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판하며 태동하였고, 근대 형사사법 개혁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 ③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인간이 자유의지(free-will)에 입각한 합리적 존재라는 기본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 ④ 고전주의 범죄학은 처벌이 아닌 개별적 처우를 통한 교화 개선을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으로 본다.

10. 신고전주의 범죄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사람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대효용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 ② 합리적선택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범행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처벌의 가능성과 강도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 ③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범죄 발생의 3요소 중 가해자의 범행 동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다.
- ④ 신고전주의 범죄학의 등장은 실증주의 범죄학 및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관련이 있다.

11. 초기 통제이론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이(Nye)는 가정을 사회통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리스(Reiss)는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인 개인적 통제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③ 레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은 청소년 비행의 요인으로 내적배출요인과 외적유인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 ④ 토비(Toby)의 통제이론은 범죄를 통제하는 기제로써 자아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였다.

12. 시카고학파인 쇼(Shaw)와 맥케이(McKay)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이 바뀌었을 때 해당 지역의 범죄율도 함께 변했다.
- ② 시카고 시(市)의 전이지대(transition zone)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③ 새로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 해체 상태가 초래되었다.
- ④ 범죄지역에서는 전통적 규범과 가치가 주민들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13.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명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일반적 학습과정의 기제와 다르다.
- ②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 ③ 차별적 접촉은 교제의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있어 다양할 수 있다.
- ④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관으로 설명될 수 없다.

14. 머튼(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의 발생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물질적 성공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화
- ② 성공을 위한 제도화된 기회의 부족
- ③ 급격한 사회변동과 위기
- ④ 공평한 성공기회에 대한 평등주의적 이념

15. 코헨(Cohen)이 1955년에 발표한 비행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사회학습이론의 틀을 빌어 비행하위문화의 형성과정 및 유래를 제시한다.
- ② 하층 비행청소년들의 비행 하위문화가 비실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 ③ 중간계급의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하층 청소년들이 하위문화 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을 문화적 혁신이라고 하였다.
- ④ 경제적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계급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적응이 긴장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16. 다음은 사이크스(Sykes)와 마차(Matza)의 중화기술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되는 유형은 무엇인가?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지도층도 다들 부패했고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아. 그들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위선자들일 뿐이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화이트칼라범죄를 봐.’

-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 ② 피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 ③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 ④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17.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레머트(Lemert)는 조직적이고 일관성 있게 일어나는 일차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② 탄넨바움(Tannenbaum)은 「범죄와 지역공동체」(Crime and the Community, 1938)라는 저서에서 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범죄자로 낙인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 ③ 패터노스터(Paternoster)와 이오반니(Iovanni)에 의하면 낙인이론의 뿌리는 갈등주의와 상징적상호작용이론으로 볼 수 있다.
  - ④ 낙인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낙인 가능성 및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18. 샘슨(Sampson)과 라움(Laub)의 생애과정이론(연령-단계이론)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범죄행위의 지속과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②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구조적 변화가 범죄로부터 단절된 삶으로 이끈다.
  - ③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유대와 범죄행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
  - ④ 결혼, 취업, 군입대는 범죄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인생의 변곡점이다.

19. 엘리엇(Elliott)과 동료들의 통합이론(Integrated Theory)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은 부모의 강압적 양육 방식으로 인해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약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 ②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성공기회가 제약되면 긴장을 느끼고 불법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 ③ 가부장적 가정은 양성평등적 가정보다 청소년비행에 있어 성별 차이가 크다.
  - ④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을 받더라도 사회유대가 강한 청소년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작다.

20. 범죄 원인에 대한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릴 가능성이 커진다.
  - ②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릴 가능성이 커진다.
  - ③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릴 가능성이 커진다.
  - ④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릴 가능성이 커진다.

21. 다음은 두 명의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상의 대화이다.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범죄학자들의 이름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여 행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행동을 부추기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① 가. 갓프레드슨(Gottfredson), 나. 허쉬(Hirschi)
- ② 가. 허쉬(Hirschi), 나. 서덜랜드(Sutherland)
- ③ 가. 에이커스(Akers), 나. 서덜랜드(Sutherland)
- ④ 가. 갓프레드슨(Gottfredson), 나. 에이커스(Akers)

22. 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의 재통합적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치란 일종의 불승인 표시로서 당사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브레이스웨이트는 상호의존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일수록 재통합적수치의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 ③ 재통합적수치이론은 형사처벌의 효과에 대하여 엇갈리는 연구결과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브레이스웨이트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의식, 용서의 말과 몸짓만으로는 재통합적수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23. 1990년대에 등장한 긴장이론의 하나인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 '힘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 ② 머튼의 긴장이론이 갖고 있던 거시적 관점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 ③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 사조의 저변에는 성취지향, 개인주의, 보편주의, 물신주의(fetishism of money)의 네 가지 주요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 ④ 머튼의 긴장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 범죄현상에 대한 급진적 페미니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역할로 인해 노동의 성 분업이 이루어졌고, 남성에게 대한 여성의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남성에게 더 많은 범죄기회가 주어졌다.
  - ②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믿음과 남성지배-여성종속의 위계구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정당화되었다.
  - ③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남성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내몰리면서 남성의 경제적 지배를 위협하는 여성의 행동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 ④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 성 역할의 차이로 인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25.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잭프레드슨과 허쉬는 성인기 사회유대의 정도가 한 개인의 자기통제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잭프레드슨과 허쉬는 자기통제능력의 상대적 수준이 부모의 양육방법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 ③ 잭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능력의 결핍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 ④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6. 경찰청은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하고 있다(2021년 기준). 다음 중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해킹                                  ② 사이버 도박  
③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④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27. 각 유형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라는 용어는 서덜랜드(Sutherland)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 ② 미국 FBI의 정의에 따르면, 증오범죄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원한 또는 복수심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 ③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적절히 돌보지 않는 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어떠한 범죄가 화이트칼라범죄인지 여부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8. 형벌의 목적 중 소극적 일반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벌을 통해 범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한다.
- ② 형벌을 통해 일반인의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사회의 규범 안정을 도모한다.
- ③ 준엄한 형집행을 통해 일반인을 위하함으로써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
- ④ 형벌의 고통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스스로 재범을 억제하도록 한다.

29.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잠재적 범죄자를 조기에 판별하고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2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범죄 실태에 대한 대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1차적 범죄 예방에 가장 가깝다.
- ③ 2차적 범죄예방은 대부분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④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모델은 질병예방의 보건의료 모형을 차용하였다.

30.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PTED는 주거 및 도시지역의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 ② 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감시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 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시키는 원리이다.
- ③ 뉴먼(Newman)은 방어공간의 4가지 구성요소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을 제시하였다.
- ④ CPTED의 기본원리 중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원리이다.

31. 다음의 내용은 범죄예측 방법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정신과 의사나 범죄학을 교육받은 심리학자가 행위자의 성격 분석을 위한 조사와 관찰 등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을 말한다. 대상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단자의 자료해석 오류가능성이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위험으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① 전체적 관찰법 (직관적 관찰법)
- ② 경험적 개별예측 (임상적 예측법)
- ③ 점수법 (통계적 예측법)
- ④ 구조예측 (통합적 예측법)

32. 클락(Clarke)이 제시한 상황적범죄예방 기법 중 보상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목표물 견고화
- ② 접근통제
- ③ 자연적 감시
- ④ 소유자 표시

33. 멘델존(Mendelsohn)은 범죄피해자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 ① 피해자의 유책성(귀책성)
- ② 피해자의 외적특성과 심리적 공통점
- ③ 피해자의 도발유무
- ④ 일반적 피해자성과 잠재적 피해자성

34.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들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은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조적 요인이 개인별 생활양식의 차이를 야기하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차이가 범죄피해 가능성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본다.
- ②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사람들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변화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고찰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은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합한 표적(범행대상), 보호(감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치할 때 범죄피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④ 펠슨(Felson)은 경찰과 같은 공식적 감시자의 역할보다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 비공식적 통제수단에 의한 범죄예방과 억제를 강조하였다.

35. 회복적사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초의 공식적인 회복적사범 프로그램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도입된 피해자-가해자 화해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이다.
- ② 가족집단 회합모델(family group conference)은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에서 유래하였다.
- ③ 썬클 모델(circle)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캐나다 원주민들에 의해 사용되던 것으로 범죄상황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동체 내로 재통합하려는 시도이다.
- ④ 미국에서 시행된 가장 대규모의 회복적 사법제도는 버몬트 주의 배상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이다.

36. 다음은 각 경찰활동과 해당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을 짝지은 것이다. 이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순찰을 통해 경찰력을 주민들에게 자주 노출 시키는 것 -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나. 전환처우(다이버전)를 통해 형사처벌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 -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다. 지역주민들을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라. 방법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위험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 - 허쉬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마. 지역 내 무질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것 -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 ① 가, 다, 라                      ② 가,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마

37. 소년범죄의 처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년보호조치를 할 때 소년 개개인을 독립된 단위로 하여 독자적인 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 ② 비행소년의 처우는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분석과 검토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 ③ 소년보호절차에서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개인적 환경 특성에 대한 판단을 최소화하고 비행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④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시설 내 처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8. 전환처우(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환처우는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부여해 범죄인에 대하여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처우는 훈방, 통고처분 등이 있다.
- ③ 전환처우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전환처우는 성인형사사법에서보다는 소년형사사법에서 더욱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39. 자유형 중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의 개선의욕을 촉진할 수 있다.
- ②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 ③ 상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④ 「소년법」은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0. 범죄인처우모델(교정처우모델) 중 교화개선을 위한 모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의료모델(치료모델)
- ② 경제모델(적응모델)
- ③ 재사회화모델(재통합모델)
- ④ 정의모델(공정모델)

## 1. 법치행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
- ③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 신청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동의요건조항은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은 없다.
-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 3.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사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 「평생교육법」 해당 조항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한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4. 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사등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 ②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구 「담배사업법」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해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해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 5. 행정입법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든가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다면 무효이다.
- ② 수권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 ③ 예측가능성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④ 조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에 재위임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다시 위임하여야 한다.

## 6.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 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그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상위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며 법률의 시행에 반대하는 여론의 압력이나 이익단체의 반대와 같은 사유는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④ 댐 건설로 손실을 받은 주민들은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이 손실보상 청구절차 및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것을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7.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도와 명령을 할 것인지의 결정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 취소여부의 결정
- ③ 감정평가사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합격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의 결정
- ④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발굴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허가권자의 결정

8.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 ②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불허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9.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등을 적용한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10. 강학상 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②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④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 제6항의 위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은 이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②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법률이 입법사항을 위임할 때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아니한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

12.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면 붙일 수 있다.

13.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강제조사 중 조사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피조사자에 대한 실력행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행정조사에서 나아가 범죄수사를 하면서 행하는 압수·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 ③ 판례는 세무조사의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 ④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통계법」상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실시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분기준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입법절차에 따라 공포하여야 하나, 행정규칙 형식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않는다.
- ② 처분의 이유제시 원칙은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에 적용되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처분의 방식과 처분 신청의 방식 모두에서 문서주의를 취한다.
- ④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사전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을 할 때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릴 필요가 없다.



15.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② 양도인이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고)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의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개정된 근거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④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6.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②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30일 전까지 하여야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계고’에 해당한다.
  - ③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조세 부과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이후, 이러한 위헌 결정의 효력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채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1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④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9. 국가배상의 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가. 배상심의회에 의한 결정절차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며 임의절차이다.  
 나. 특별심의회는 군인·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하는 사건의 배상 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두며, 본부심의회 아래에 있는 하급 심의회이다.  
 다.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법」상 배상기준은 단순한 배상의 기준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 판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 ① 가(○), 나(○), 다(○), 라(○)
  - ② 가(X), 나(○), 다(X), 라(X)
  - ③ 가(X), 나(X), 다(○), 라(○)
  - ④ 가(X), 나(X), 다(○), 라(X)
20.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 측에 있으므로 국가가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② 추상적 과실, 조직 과실 등은 객관설 입장에서 과실 개념의 객관화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 ③ 과실개념에 대해 객관설을 취하면 위법하지만 무과실인 경우 즉 위법·무과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청의 내부기준인 재량권 행사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다.

21.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사항에 대하여 재결할 수 있다.
  - ② 직접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직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취소심판의 인용재결로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및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 ④ 서면으로 하지 않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취소할 수 있다.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등교육법령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 ②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은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 ④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대집행을 실시하기에 앞서, 건물 소유자들을 건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별도로 퇴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다.
- ②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협의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협의취득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다.
- ④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4.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종전의 처분을 단순히 확인하는 행위로 독립한 처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① 가, 나
-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2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보고 공익사업 주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의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인정 이전에 임의협의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요구하더라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재산권에 대한 수용은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민간기업은 공용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상되어야 할 손실에는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등도 포함된다.
- ②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증감소송에 의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업인정 후에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로 볼 수 있다.
- ④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해당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7.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결과제거청구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되나 법적 행위에 의한 침해에 한하며, 사실행위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결과제거청구의 요건으로서 '위법한 상태의 존재'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③ 민법상의 과실상계 규정은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 ④ 민법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정도의 상태 회복을 의미하지만,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은 공행정작용의 직접적인 결과만을 제거의 대상으로 한다.

28.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판례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처분의 동일성 여부로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중앙행정기관이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④ 취소소송의 관련 청구소송과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이 모두 가능하다.

29.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행정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 ②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으로서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 등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③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을 할 수 없다.

30.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④ 공공기관에 의하여 보유·관리되는 정보가 공개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정보가 전자적 정보로서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로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할 수 있고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1.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②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의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③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민소송의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해당 주민감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오인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사청구한 주민은 위법한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2.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 ④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해당 조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없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33.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비록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 ③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
- ④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3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국가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중 특히, 업무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 ③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이다.

35.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채권존재확인 소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도시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인정 여부에 관한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② 취소소송의 규정 중 피고경정, 공동소송,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③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정해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④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6.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간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
- ③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전라북도의회가 의결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들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직속기관의 명칭에 ‘교육청’을 추가하거나 지역 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례 개정안이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관조직편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제2차 계고처분, 제3차 계고처분이 발해진 경우 최후의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유일한 행정처분이 된다.
- ② 「병역법」상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행정청이 금전부과처분을 한 후 감액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8. 과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된다.
- ③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 ④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9.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옥외광고물표시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구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④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은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 ②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구체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 ④ 관할 행정청이 토지수용사업승인을 한 후 그 뜻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절차상 위법으로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 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은 넓은 의미로 공공단체, 기업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이다.
- ② 공·사행정 이원론에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함께 효율적 관리를 강조한다.
- ③ 윌슨(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합을 주장한다.
- ④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 2.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익에 대해 과정설에서는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하며,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 ② 롤스(Rawls)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minimax)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
- ③ 사회적 능률성(social efficiency)은 디мок(Dimock)이 제시한 개념으로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된다.
- ④ 효과성(effectiveness)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적 관계가 강조된다.

## 3. 행정학 관련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굿노(Goodnow)는 정치는 국가의지의 표현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했다.
- ② 테일러(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POSDCoRB를 제시했다.
- ③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연속·순환적이어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④ 메이요(Mayo)는 호손실험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 4. 시장실패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로 인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 ② 외부불경제의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과소공급되므로 정부는 보조금을 비롯한 공적 유도가 필요하다.
- ③ 정보의 비대칭성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유도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 ④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때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공급이나 정부규제가 필요하다.

## 5. 정책과정 참여자 중 비공식적 참여자만 모두 나열한 것은?

- ①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 ② 국회, 정당, 전문가집단, 지방정부
- ③ 정당,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사법부
- ④ 대통령, 이익집단, 언론, 전문가집단

## 6.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윌슨(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분류하고, 여기에서 포획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 나.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 다. 관리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수단과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 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다.
- 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제목적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7.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뷰캐넌과 툴록(Buchanan & Tullock)은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외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도 증가하므로 적정 참여자 수를 강조한다.
- ② 티부(Tiebout)는 '발에 의한 투표'가 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독점적 역할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 ③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주장한다.
- ④ 던리비(Dunleavy)는 예산의 성격과 기관유형 등에 따라 고위 관료들이 예산극대화 행동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8.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는 정부를 노젓기의 중심에 놓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관계를 강조한다.
- ② 신공공관리는 경쟁과 선택을 중시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협력을 강조한다.
- ③ 신공공관리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 ④ 신공공관리는 관료를 조정자로 보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본다.



9.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로위(Lowi)의 분배정책에서는 포크배럴(pork-barrel)이나 로그롤링(log-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나.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진입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다. 알몬드와 파워(Almond & Powell)의 상징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책으로 조세, 징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라. 리플리와 플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재분배정책은 정책집행을 위한 안정적 절차화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논쟁 강도는 높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가, 라
- ④ 나, 다

10. 미래예측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가. 관련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하여 미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분석기법
- 나.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 의견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집단토의기법
- 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익명성이 보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의견조정과 합의를 유도하는 기법

- |   | 가      | 나      | 다      |
|---|--------|--------|--------|
| ① | 델파이    | 브레인스토밍 | 교차영향분석 |
| ② | 교차영향분석 | 브레인스토밍 | 델파이    |
| ③ | 브레인스토밍 | 델파이    | 교차영향분석 |
| ④ | 교차영향분석 | 델파이    | 브레인스토밍 |

11.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만족모형에서 정책담당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모든 대안을 탐색하지 않고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 나.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두 요소를 절충한 것으로 근본적 정책결정은 점증모형을, 부분적 정책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른다.
- 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의 정책결정을 설명하며 정책결정 요소들이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라. 엘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고, 엘리슨의 세 가지 모형은 실제 정책결정을 설명하는데 모두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마. 정책딜레마모형은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약하고 집단 간 권력이 불균형적일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고 본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2.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 유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전문성과 기술 등의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정책결정자의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 ②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정책결정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한다.
- ④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목표의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13.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구성타당성은 실험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을 말하며 성숙효과가 있을 때 저해된다.
- ② 외적타당성은 실험결과의 일반화 수준으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을 때 저해된다.
- ③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모방효과는 실험 직전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사람이 실험 진행과정에서 원래 성향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 ④ 신뢰성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 사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으로 타당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14. 조직몰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소속조직 및 소속조직의 목표와 일치화되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태도의 수준을 말한다.
- ② 태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일화하여 내재화할 때 발생된다.
- ③ 행위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이유로 조직에 남는 행동을 의무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 ④ 타산적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보상과 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태도이다.

15. 조직진단을 위한 환경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왓(SWOT) 분석
- ② 페스트(PEST) 분석
- ③ 스테퍼(STEPPE) 분석
- ④ 비용편익(B/C) 분석

16.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안정적 공급 확보가 용이하다.
- 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공간 제약이 완화된다.
- ③ 참여 주체의 기회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비용이 증가한다.
- ④ 조직 경계가 모호해 정체성이 약하고 응집력이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

17.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99년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 ②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되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는 특허청이 유일하다.
  -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신분은 공무원이다.

18. 센게(Senge)가 제시한 학습조직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
  - ② 개인적 숙련(personal mastery)
  - ③ 공유비전(shared vision)
  - ④ 사고모형(mental model)

19.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스키너(Skinner)의 자극-반응의 심리학에서 발전된 동기부여 이론이다.
  - ② 적극적 강화란 자극에 따른 반응 행동에 관해 제공되는 보상이나 기타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 ③ 회피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는 것이다.
  - ④ 연속적 강화란 바람직한 행위에 대해 미리 계획된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② 목표관리제(MBO)의 목표설정은 외향적이나 총체적 품질관리의 목표설정은 내향적이다.
  - ③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최종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 업무수행 노력의 초점이 개인적 노력에서 집단적 노력으로 옮겨간다.

2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할 수 있다.
  - ③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
  - ④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22.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23. 실적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한다.
  - ②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제가 확립되었다.
  - ③ 공무원 인력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 ④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격에 따라 채용된다.

24. 직무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열법은 직위의 등급 수를 미리 정하고 등급기준표를 활용한다.
  - ② 점수법은 직무의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각 직무에 대하여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다.
  - ③ 요소비교법은 대표 직위(key position)를 선정하여 대표 직위의 평가 요소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 ④ 분류법은 등급별로 책임도, 곤란성,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기준을 고려하여 직무를 해당 등급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25.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자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일컫는다.
  - ② 후광 효과(halo effect)는 피평정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세부 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은 평정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말한다.
  - ④ 초두 효과(primacy effect)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기간에 가장 근접한 기간의 업무수행 실적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하는 오류를 말한다.

26.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 6급(상당) 이하 및 모든 임기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제 적용 대상이다.
  - ② 국가공무원 5급(상당) 이상과 국립대학교 교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③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이다.



27.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은?

가. 법령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만 65세가 되는 때부터 퇴직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나.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다.  
다. 고액연금 수급 방지를 위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이다.  
라. 기금제와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마. 유족연금 적용률은 60%이다.  
바.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이다.

- ① 가, 다, 마
- ② 나, 라, 마
- ③ 나, 라, 바
- ④ 다, 라, 마

28.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정은 어느 한 시점(t)을 놓고 보면 t+1년의 예산을 편성하고, t년의 예산을 집행하고, t-1년의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정책질의와 찬반투표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의결해야 한다.
- ③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에 이미 배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경기과열, 임금인상, 세입부족 등의 상황에서는 예산 지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 ④ 국회는 회계기록의 회계검사와 결산보고서의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집행이 예산안에 반영된 입법부의 의도를 충실히 따랐는지를 확인한다.

29. 예산원칙과 그 예외 간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일성의 원칙 - 기금
- ② 사전의결의 원칙 - 특별회계
- ③ 한정성의 원칙 - 이월
- ④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30.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는 예산지출에 대한 통제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는 사업성과가 좋은지 나쁜지의 결과에 초점을 두며 예산을 들여 사업과 활동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 ③ 계획 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
- ④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ing)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간관리층을 포함한 구성원의 참여 및 이들의 상향적 의사소통 통로가 확대된다.

3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검토한다.
-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양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 ④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금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32.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체주의는 기존의 예산을 토대로 수정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결정을 추구한다.
- ② 점증주의는 각 이해집단 간 정치적 상호작용을 통한 최적의 예산결정을 모색한다.
- ③ 단절균형모형 관점에서 예산결정의 참여자들은 점증적인 예산 결정 행태를 보이다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예산결정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킨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 관점에서 예산과정은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되기보다는 예산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실제 예산배분이 결정된다.

33.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식부기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해야 한다.
- ② 현금주의는 비용과 수익을 알 수 없어서 경영성과 파악이 어렵다.
- ③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에 유리하다.
- ④ 현금주의는 교량, 박물관, 체육관 등 가시적 치적 쌓기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회계제도이다.

34.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중기적 재정운영보다는 개별 사업 위주의 단년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  
나. 각 부처는 소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 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다. 재정 운용의 집권과 분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하향적 예산 편성 방식이다.  
라. 한도액의 설정으로 각 부처의 과도한 예산요구 관행을 줄일 수 있다.  
마.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책임성과 권한이 강화된다.

- ① 가, 나, 다
- ② 나, 다, 라
- ③ 가, 나, 라, 마
- ④ 나, 다, 라, 마

35. 다음 중 (가)와 (나) 안에 들어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 -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나 ) - 지방정부가 배분받은 사무는 되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         |
|-----------|---------|
| ( 가 )     | ( 나 )   |
| ① 보충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 ② 불경합의 원칙 | 효율성의 원칙 |
| ③ 현지성의 원칙 | 불경합의 원칙 |
| ④ 효율성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36.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층제는 중층제보다 행정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층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단층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37.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하고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나.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는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다. 지역 간 치안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        |           |
|--------|-----------|
| ① 가, 나 | ② 나, 다    |
| ③ 다, 라 | ④ 가, 다, 라 |

38.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통합형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② 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③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관통합형이며 중앙통제형 강시장-약의회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 ④ 우리나라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39.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갖는다.
- ②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 ③ 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④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수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4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가.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           |           |
|-----------|-----------|
| ① 가, 나    | ② 가, 다    |
| ③ 가, 나, 다 | ④ 가, 다, 라 |

1.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②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의 내용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이미 성립된 관습법은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능력은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의해 취득하므로, 반대의 증거가 있더라도 번복될 수 없다.
- ②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후에 그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실종상태에 있는 자 중에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망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④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그 태아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실혼 관계인 미성년자(18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후견개시심판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 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용돈을 친구에게 빌려주는 행위
- ③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전의 차용
- ④ 채무면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

4.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후견 개시심판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이다.
- ③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미성년자는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만 16세인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丙에게 매각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만 20세가 된 甲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하였지만,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丙은 추인여부의 확답에 대한 촉구를 甲에게 할 수 있다.
- ③ 丙은 乙이 추인하기 전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甲이 丙에게 적극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 甲은 계약을 취소하고 받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6.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정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행사할 수 없다.
- ④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없다.

7.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본인이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경우,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이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가정법원은 그 자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③ 성년인 본인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이지만, 성년후견종료 심판의 청구권자는 아니다.
- ④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8. 부재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언제나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②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였으나 그 후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③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면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은 소멸한다.

10.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에 의해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이 될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이 될 자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라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이다.
- ④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으면 실종자의 생존 등의 반증이 있더라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지속된다.

11.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고 이해관계인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④ 실종선고를 받았지만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실종자는 다른 주소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하고登記하여야 한다.
-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登記하여야 한다.

13.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 사원이 총회의결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사원은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사단법인의 총회는 소집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정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 ③ 재단법인의 기본재산변경은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④ 대표기관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14.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자신의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하여 석불을 제작한 경우, 그 석불은 임야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거나登記되지 않은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지 않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 ③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1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물이 부동산인 경우, 종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한다.
- ② A 물건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B 물건이 A 물건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B 물건은 A 물건의 종물이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물과 종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주물의 매도인은 주물뿐만 아니라 종물의 소유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6.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② 은비(隱秘)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 ③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은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법정과실을 취득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는 유효하다.

17.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②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취득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원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채권 중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18.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
- ②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와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자간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
- ③ 대주가 일반 개인이며, 대차원금이 1천만원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의 약정이자율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
- ④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19. 다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공경매에도 적용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침관계를 해소하면서 상대방의 장래 생활대책 마련을 위해 복수의 부동산 중 한 필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유효이다.
- ③ 민사소송에 관한 변호사선임계약에서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성공보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제1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2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2매수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유효이다.

2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계약당사자 쌍방이 A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지만, 착오로 계약서에는 B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B 물건이 아닌 A 물건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계약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③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는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지만,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차이가 있다.
- ④ 甲이 乙을 통하여 丙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乙 명의로 하기로 甲·乙·丙이 합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乙이 아닌 甲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2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의사표시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라도 의사표시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 ② 상대방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에 대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 ③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 ④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2. 다음 중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나. 가장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자
  - 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된 때에 그 파산자의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 경우에 있어 파산관재인
  - 라.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상속인
  - 마.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에서의 본인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라.
- ③ 나. 라. 마.
- ④ 다. 라. 마.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동기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의사표시자는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③ 의사표시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법률행위의 내용 중 사소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선의 및 무과실인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의사표시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의사표시자가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허위로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이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 ② 강박행위는 강박자의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과실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강박이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6.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은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에 생긴다.
- ②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 자의 사망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주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를 발한 때에 발생한다.
- ④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피특정후견인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27.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8.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더라도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9.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허용된다.
- ②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 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쌍방대리 금지에 반한다.

30. 甲의 임의대리인 乙은 자신의 이름으로 甲의 대리인 丙을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甲과 丙 사이에는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도 없다.  
 나. 乙은 甲의 승낙으로 丙을 선임하였더라도 甲에 대하여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甲에게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하였다면 책임이 있다.  
 라. 丙이 甲의 지명으로 선임된 경우,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31.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
-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④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것만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2.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②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술을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33.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丙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乙 또는 丙에게 할 수 있다.
- ② 丙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甲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하지 못한다.
- ③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乙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乙의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인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5.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는 조건성취 전에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36.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37. 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002. 12. 1.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2021. 12. 1.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 ② 「민법」 제71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을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사원총회일이 2001. 8. 9. 14시라면 늦어도 2001. 8. 1. 24시까지는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2010. 3. 12. 17시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은 2012. 3. 12. 24시에 만료한다.
  -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3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법으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③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사유로서 묵시적 승인은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39.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권도 이자채권에 해당한다.
  - ② 변제기가 1년 이내인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는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된다.
  - ④ 전기요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한다.

40.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채무자에게 미치게 된다.
  - 라.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